

##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와 인적자본투자 결정

조인숙\*

### 요약

이타적 동기를 가진 부모는 유산상속을 통해서 또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가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론적 예측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상속세가 부모로 하여금 유산상속을 교육에 대한 투자로 대체할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상속세가 높을수록 부모는 유산상속을 줄이고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세와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규모가 서로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속세가 국가별 교육수준 격차를 설명하는 한 요인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분류 : B030400, B030701

핵심 주제어 : 이타적 부모, 상속세, 교육에 대한 사적지출

## I. 서론

자녀의 안녕을 염려하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진 부모는 자신의 자산을 상속함으로써 자녀의 미래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로부터 효용을 얻는다(Barro, 1974). 이타적 동기를 가진 부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데, 첫째는 물적자산을 직접 상속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교육에 투자를 하여 자녀의 인적자본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녀의 미래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간 상속세가 이타적인 부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적정 상속세 수준에 대한 논의, 또는 상속세가 부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조교수, e-mail: icho@yonsei.ac.kr

모의 소비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sup>1)</sup>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출 규모와 상속세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와 같이 상속세가 이타적 동기를 가진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하여 이타적 부모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고, 이로부터 상속세와 자녀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규모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세가 높은 국가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규모가 더 크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와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이론적 예측에 대한 실증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국가 간 교육수준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속세가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상속세와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국가별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세와 자녀교육에 대한 사적투자규모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논의

이타적 동기를 가진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 결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기 세대중첩모형(Grossmann and Poutvaara,

---

1) 적정 상속세에 대한 논의들은 이중과세로 인한 자본형성에 대한 동기상실(Chamley, 1986; Judd, 1985), 자산분배의 비형평성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Kopczuk, 2001),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한 인적자본 형성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Jones et al., 1993, 1997)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속세가 부모의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은 유산상속에 대한 다양한 부모의 동기에 따라 부모의 소비와 저축, 유산상속에 대한 모형을 수립하고, 이론적 예측과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Becker and Tomes, 1979; Bevan and Stiglitz, 1979; Bernheim et al. 1985; Abel, 1985).

2009)을 활용한다. 제1기에 개인은 한 단위의 시간을 부여받아 주어진 시간을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투자에만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제1기의 소비와 여가에 대한 수요 결정은 생략한다. 제2기에 개인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며, 소비수준을 결정하고,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한다고 가정한다. 제3기에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노후소비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배분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동세대 내 개인은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불확실성은 없다고 가정하며, 완전균형이 아닌 부분 균형을 고려하므로, 장기성장에 대한 시사점은 논의하지 않는다.

총생산함수는 물적자본(K)과 인적자본(H) 두 변수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매 기마다, 한 단위의 동질적 소비재가 생산되며, 생산물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판매된다. 생산함수는 선형동차이며 규모에 대해 수확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모든 생산요소는 한계생산규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이 국제이자율을 결정하는 소규모개방경제의 단순한 경우를 분석한다. 따라서 임금수준과 이자율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시간에 따라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i.e.  $r_t = \bar{r}$ ,  $w_t = \bar{w}$ ).<sup>2)</sup>

인적자본은 단위 노동의 질을 나타내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본적인 (인적)자본의 양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Becker and Tomes, 1979).<sup>3)</sup>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인적자본의 양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인적자본 생산함수 내에서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시점  $t$ 에 태어난 개인의 인적자본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_{t+1} = h(e_t) = \eta e_t^\gamma E_t^\delta$ .<sup>4)</sup> 이 인적자본 생산함수

- 2)  $t$ 기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Y_t = F(K_t, H_t) = H_t f(k_t)$ . 여기서  $K_t$ 와  $H_t$ 는 각각  $t$ 기에 고용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나타내며,  $k_t = K_t/H_t$ 를 가정한다. 또한 함수  $f(\cdot)$ 는 단조증가함수이며 강오목함수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가정 하에서, 실질이자율( $r_t$ )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며, 시간에 따라 불변이다 (i.e.  $r_t = \bar{r}$ ).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  $\bar{r} = f'(k_t)$ 를 의미하므로,  $k_t = (f')^{-1}\bar{r} \equiv \bar{k}$ 가 성립한다. 인적자본 한 단위에 대한 임금( $w_t$ )은  $w_t = f(\bar{k}) - \bar{k}f'(\bar{k}) \equiv \bar{w}$ 이 성립하며, 생산량은  $Y_t = H_t f(\bar{k})$ 로 표시할 수 있다.
- 3) 이 연구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 (예: 학교의 질, 교육연수 등)에 대해 결정하며 자녀는 이를 수동적으로 따른다고 가정한다. 단, 자녀는 교육에 투입할 노력의 정도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한다.
- 4) 인적자본 생산함수  $h(\cdot)$ 는 단조증가함수이며 강오목함수이다. 이 함수에서 교육에

에서  $e_t$ 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사적 투자,  $E_t$ 는 공교육의 질을 나타낸다.  $\eta$ 는 개인별 교육생산성에 대한 지표이다. 이 함수에 따르면  $t$ 기에 태어난 개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t+1$ 기에  $h_{t+1}$ 만큼의 인적자본을 가지게 된다.<sup>5)</sup>

제1기( $t$ 기)에 태어난 개인의 효용수준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제2기( $t+1$ 기)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제3기( $t+2$ 기)에 누리는 소비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타적인 동기를 가진 개인의 효용수준은 제2기( $t+1$ 기)에 태어난 자녀가 다음기( $t+2$ 기)에 얻게 될 가처분소득의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t$ 기에 태어난 이타적인 부모의 효용수준은 자신의 생애소비 ( $c_{1,t+1}$ ,  $c_{2,t+2}$ )와  $t+1$ 기에 태어난 자녀의 가처분소득 ( $I_{t+2}$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효용함수가 가산적으로 분리가능하다고 가정하면,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U_t = u_1(c_{1,t+1}) + \beta u_2(c_{2,t+2}) + \rho V(I_{t+2})$ . 이 때,  $\beta$ 는 부모의 현재소비와 노후소비에 대한 개인 선호를 반영하며,  $\rho$ 는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반영한다.<sup>6)</sup>

이제 이타적 동기를 가진 부모들의 예산제약을 생각해보자. 제2기에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 ( $h_{t+1} \cdot w_{t+1}$ )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 $b_{t+1}$ )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세와 상속세는 각각  $\tau_w$ 와  $\tau_b$ 로 표시된다:  $I_{t+1} = (1 - \tau_w)h_{t+1}w_{t+1} + (1 - \tau_b)b_{t+1}$ . 개인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을 소비( $c_{1,t+1}$ )와 자녀교육( $e_{t+1}$ )에 지출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 $s_{t+1}$ )한다. 이 때 제2기의 예산 제약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_{1,t+1} + s_{t+1} + e_{t+1} = I_{t+1}$ . 제3기에 개인은  $t+1$ 기에 저축을 통해 마련한 은퇴자금을 소비( $c_{2,t+2}$ )와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 $b_{t+2}$ )으로 배분하는 결정을 내리며, 이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tau_s$ 로 표시한다. 제3기의 개인의 예산제약은 다

대한 사적 투자 규모( $e_t$ )와 공교육의 질( $E_t$ )은 서로 보완 관계이며, 인적자본 생산 함수는 생산요소  $e_t$ 와  $E_t$ 에 대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5) 개인의 능력변수( $\eta$ )는 교육의 생산성으로 볼 수 있으며, 능력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교육투자에 대해 더 많은 인적자본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세대 모든 개인은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므로, 능력변수 역시 모든 개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6) 각각의  $u_1(\cdot)$ ,  $u_2(\cdot)$ ,  $V(\cdot)$ 는 단조증가함수이며 강오목함수라고 가정한다. 효용함수는 모두 오목하고 2차로 미분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_{2,t+2} + b_{t+2} = (1 + \bar{r}(1 - \tau_s))s_{t+1}$ .

이타적인 동기를 가진 부모는 자신의 소비,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자녀에게 불러줄 유산의 규모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의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1차조건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아래의 세 수식은 개인의 소비, 교육투자, 유산상속액에 대한 최적해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sup>7)</sup>

$$\frac{u'_1(c_{1,t+1})}{u'_2(c_{2,t+2})} = \beta(1 + \bar{r}(1 - \tau_s)) \tag{1}$$

$$\frac{u'_1(c_{1,t+1})}{V'(I_{t+2})} = \rho(1 - \tau_w)\bar{w}\gamma\frac{h_{t+1}}{e_t} \tag{2}$$

$$\frac{u'_2(c_{2,t+2})}{V'(I_{t+2})} = \rho(1 - \tau_b)/\beta \tag{3}$$

위의 세 조건방정식이 시사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자. 식 (1)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 한계대체율은 저축에 대한 순수익률과 일치한다는 잘 알려진 결론을 보여준다. 식 (2)는 현재소비와 자녀소득 간 한계대체율은 자녀가 인적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수익과 일치한다는 조건을 보여준다. 식 (3)은 부모의 미래소비와 자녀가 상속받을 유산 간 한계대체율은 자녀가 유산으로부터 얻는 순수익과 일치해야 함을 시사한다.

위의 1차조건방정식 (1)~(3)과 인적자본 생산함수를 활용하면, 상속세와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frac{h_{t+1}}{e_t} = \frac{\eta e_t^\gamma E_t^\delta}{e_t} = \frac{(1 + \bar{r}(1 - \tau_s))(1 - \tau_b)}{\bar{w}(1 - \tau_w)\gamma} \tag{4}$$

이 때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규모( $e_t$ )와 상속세율( $\tau_b$ ) 간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경우, 위의 식 (4)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효용극대화 문제의 내부해만 고려한다.

$$e_t = \bar{E} \left( \frac{(1 - \tau_w) \bar{w} \gamma}{(1 - \tau_b)(1 + \bar{r}(1 - \tau_s))} \right)^{\frac{1}{1 - \gamma}}, \text{ where}$$

$$\bar{E} = \left( \frac{1}{\eta E_t^\delta} \right)^{1/1 - \gamma} \quad (5)$$

자녀 교육에 대한 최적 투자규모는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의 세후순수익률과 유산상속에 대한 세후수익률이 일치할 때 결정된다. 이 때 주어진 근로소득세 수준에서,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높아지면 상속유산의 세후가치가 줄어든다.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가치분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자녀의 인적자본을 늘려서 자녀의 미래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인상은 자녀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sup>8) 9) 10)</sup>

### Ⅲ. 실증분석

이 연구는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규모와 상속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식 (5)에서의 이론적 예측을 다음과 같은 단순한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_{ct} = \alpha_0 + \alpha_1 \tau_{bct} + \alpha_2 y_{ct} + \alpha_3 E_{ct} + \epsilon_{ct} \quad (6)$$

- 
- 8)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 $e_t$ )와 GDP( $Y_t$ )가 상속세의 증가함수라는 점이다. 상속세가 늘면 자녀교육에 대한 사적투자규모가 늘고, 그에 따라 GDP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 9) 위의 식 (5)는 근로소득세의 인상은 교육에 대한 투자동기를 줄인다는 것을 보여준다(Michel and Pestieau, 2004). 앞서 언급한대로 근로소득세는 분석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 10) 근로소득세가 양의 값을 가질 때 상속세가 0이라면, 부모는 유산상속을 통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산상속으로 대체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인적자본에 대한 과소투자라는 부정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의 값을 가지는 상속세의 존재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한 왜곡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세대 간 자산 이전의 구성에 있어서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최적 상속세는 존재할 수 있다(Grossmann and Poutvaara, 2009).

여기서  $e_{ct}$ 는  $c$ 국의  $t$ 년도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규모,  $\tau_{bct}$ 는  $t$ 년도 당시  $c$ 국의 평균 유효상속세율,  $y_{ct}$ 는  $c$ 국의  $t$ 년도 일인당 GDP수준,  $E_{ct}$ 는  $c$ 국의  $t$ 년도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규모를 나타낸다.

국가별 비교를 통해 상속세와 부모의 교육에 대한 투자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직계가족에 대한 상속세율,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규모,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등의 변수들을 활용한다. 국가별 상속세율 자료는 국제조세컨설팅서비스 기관인 Ernst & Young에서 발행한 『*International Estate and Inheritance Guide 2012*』와 유럽의 경제연구기관인 Copenhagen Economics에서 발행한 『*Study on Inheritance Taxes in EU*』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직계 자녀에 대한 실효상속세율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부가적으로 국가별 조세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1>은 상속세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21개국의 2008년 기준 상속세 부과여부 및 평균유효세율, 증여세율을 보여준다. <표 1>은 조사대상국 대부분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상속세의 크기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국가별 상속세율**

국가명	상속세율	증여세율	국가명	상속세율	증여세율
남아프리카공화국*	20	20	스페인	13.6	13.6
네덜란드	15	15	싱가포르		2
노르웨이	6	6	영국*	40	20
뉴질랜드		10	이탈리아*	4	4
덴마크*	15	15	일본	25	25
독일	19	19	체코	0	0
룩셈부르크	0	1.8	터키	5	20
미국	27	27	프랑스	20	20
벨기에	10	10	핀란드	10	10
브라질	1	1	한국	30	30
스위스	0	0			

자료: Ernst & Young, *International Estate and Inheritance Guide 2012*. Copenhagen Economics, *Study on Inheritance Taxes in EU*.

주: 표에 표시된 세율은 2008년 기준으로 직계가족에게 부과되는 평균세율임. \*표시는 상속 규모에 상관없이 정률세를 부과하는 나라이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됨

국가별 교육에 대한 투자규모자료는 OECD에서 발행하는 『Education at a Glance』 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 표2는 조사대상국을 상속세 부과국과 미부과국으로 구분하고, 이들 국가들의 일인당 소득수준, 교육수준, 교육에 대한 지출 규모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정의 값을 가지는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총지출 규모, 개인 및 가계의 교육지출 비중 등이 모두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대졸자 비중 역시 상속세 부과국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상속세 부과 여부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

구분	일인당 GDP(\$)	총교육비 지출 <sup>1)</sup>	교육지출의 분포		교육수준		
			공공	개인	고졸	대졸	대졸 (25세-34세)
상속세 부과국 <sup>2)</sup>	37,460	6.0	82.0	18.0	43.0	29.7	38.7
상속세 미부과국 <sup>3)</sup>	30,815	5.3	84.9	15.1	43.3	31.6	36.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주: 자료는 상속세 부과국과 미부과국의 평균값을 비교한 자료임. 모든 자료는 2008년 기준임. 1) GDP 대비 교육에 대한 지출 규모를 표시함. 2) 상속세 부과국은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터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미부과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웨덴과 스위스를 포함한다.

〈표 3〉은 식(6)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교육에 대한 총지출대비 사적지출규모의 변수이며,<sup>11)</sup> 국가별 상속세, 일인당 GDP, 교육에 대한 공적지출규모, 총조세수입 변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비중은 상속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율이 0.1 퍼센티지 포인트 상승시 교육에 대한 총지출 중 사적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 교육에 대한 사적지출규모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표 3〉에 보고된 GDP 대비 교육에 대한 사적지출 규모 변수 이외에, GDP 대비 교육에 대한 가계의 지출비중, 총교육투자지출 중 가계 부담 비중, 총교육투자지출 중 사적지출 비중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변수를 활용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상속세와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비중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수준을 중·고등 교육과 대학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 사적투자비중 변수를 활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규모에 대한 다른 측정변수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지면 부족으로 생략하며, 요청시 제공가능하다.



약 6.3 퍼센티지 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속세가 높은 국가일수록 교육에 대한 사적지출의 규모가 더 높다는 것이며, 이는 이 논문의 2장에서 논의한 이론적 예측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표3의 실증 분석 결과는 일인당 GDP는 사적교육투자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지출과 보완재의 관계에 있는 공적지출규모는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두 변수에 대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상속세와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의 상관관계**

	(1)	(2)	(3)
상속세율(%)	62.84 ** (21.43)	63.21 ** (22.72)	59.99 ** (23.65)
일인당 GDP(천달러)	0.03 (0.03)	0.03 (0.04)	0.09 (0.06)
교육에 대한 공적지출규모(%)		-34.09 (400.18)	-491.24 (606.80)
총조세수입			70.63 (52.91)
관찰값 <sup>1)</sup>	18	18	18
Adj. R-squared	0.5508	0.5136	0.5328

주: 종속변수는 교육에 대한 총지출 대비 사적 지출규모 변수이다. heteroskedasticity를 고려한 robust standard error는 괄호 안에 보고되어 있음. “\*\*\*,” “\*\*,” “\*”는 각각 1%, 5%, 및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1) 뉴질랜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의 경우 실효상속세 변수 또는 교육관련 변수에 관찰값 결측이 있음. 때문에 실증분석에서는 총 18개국의 자료만 활용되었음.

## IV. 결 론

이타적 동기를 가진 부모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유산상속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한다. 상속세는 이타적 부모가 물적자본을 통한 유산상속을 줄일 동기를 제공하여 한 나라의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Michel and Pestieau, 2004).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자산 이전이라는 선택이 있을 때, 정의 값을 가지는 상속세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투자할 요인을 제공하며, 근로소득세로 인한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과소투자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Grossmann and

Poutvaara, 2009).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와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사적 투자 규모 간의 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타적 부모의 소비와 유산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을 활용하여, 상속세와 교육투자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상속세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사적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상속세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이 더 높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속세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녀 세대의 교육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속세가 국가별 교육수준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조세정책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상속세는 그 나라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다양한 조세들과의 상호연관성을 모두 고려한 적정 수준의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을 제시한다. 둘째, 정부지출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공교육의 질은 부모의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이론적 확장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다양한 종류의 조세들 간의 상호연관성과 적정 조세수준 결정, 자녀의 능력 및 노력수준에 따른 부모의 유산상속 행동 변화, 교육의 공적투자와 사적투자 간의 보완관계에 따른 부모의 교육에 대한 투자행동 변화 등과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조세제도와 그에 따른 이타적 부모의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확장되기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Barro, R. J. (1974),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1095-1117.
- Becker, G. and N. Tomes (1979),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4, No. 4, S1-S39.
- Naess-Schmidt, H., T. Pedersen, F. Harhoff, M. Winiarczyk, and C. Jervelund (2010), *Study on Inheritance Taxes in EU Member States and Possible Mechanisms to Resolve Problems of Double Inheritance Taxation in the EU*, Copenhagen Economics.
- Cremer, H. and P. Pestieau (2003), "Wealth Transfer Taxation: A Survey," CESifo Working Paper No. 1061.
- Ernst and Young (2012), *International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2*, Ernst and Young LLP.
- Grossmann, V. and P. Poutvaara (2009), "Pareto-improving Bequest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6, 647-669
- Michel, P. and P. Pestieau (2004), "Fiscal Policy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Bequest-as-consump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Vol. 6, 397-407.
- 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 Bequest Tax and Education

Insook Cho\*

### Abstract

Altruistic parents transfer their resources to their children by leaving bequests or by providing edu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quest taxation and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A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shows that a bequest tax induces parents to substitute financial bequest for investment in education. That is, a bequest tax provides incentives to reduce the size of financial bequest and increase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Using country-level data, this study also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equest taxes and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bequest taxation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cross-country variation in education attainment.

**KRF Classification : B030400, B030701**

**Key Words : altruistic parent, bequest taxation,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overnment and Business, Yonsei University, e-mail: icho@yonsei.ac.kr